

공개토론회 자료

본 자료는 2009. 6. 25(금) 夕刊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20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 산업·중소기업·에너지분야 -

2009. 6. 24(수) 16:30 ~ 18:30

국가재정운용계획 산업·중소기업·에너지분야 작업반

본 자료는 '09~'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산업·중소기업·에너지분야 작업
반에서 준비한 자료로서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프 로 그 램

16:00 ~ 16:15

등록 및 네트워킹

16:30 ~ 18:30

산업 · 중소기업 · 에너지분야

- 중소기업 정책금융의 재정운용방향

사 회 : 곽수근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

발 표 : 조영삼 (KIET 연구위원)

토 론 : 이석준 (기획재정부 경제예산심의관)

추경호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김진형 (중소기업청 경영지원국장)

이종욱 (서울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이기영 (경기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김동환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유태준 (신용보증기금 전략사업이사)

김용환 (기술보증기금 기술금융이사)

신길홍 (중소기업진흥공단 사업이사)

목 차

토론주제 : 중소기업 정책금융의 재정운용방향

I. 논의 배경	1
II. 중소기업 정책금융 지원현황 및 평가	2
1. 중소기업 금융지원의 주요 내용 및 특징	2
2. 중소기업 신용보증 지원	4
3.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13
III. 주요 검토과제	25
1. 지원수요의 적정성	25
2. 시장과의 역할 분담	28
3. 정책 위험도	29
4. 지원금리의 가격기능	32
IV. 향후 재정운용방향	35
1. 정책금융 운용의 기본원칙	35
2. 향후 재정운용방향	38

토론주제

중소기업 정책금융의 재정운용방향

I. 논의 배경

-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선제적 대응조치의 일환으로 2008년 10월 이후 중소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금융지원을 추진
 - 정부는 은행을 통한 지원, 신용보증 공급 확대, 정책자금 지원 확대 등을 통해 금융위기의 실물 파급을 조기에 차단하고자 노력
- 정부의 시의적절한 정책 대응에 의해 예상보다 빠르게 금융시장이 안정을 찾아가고 있으며, 정부의 중소기업 금융지원 대책은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
- 한편, 최근 위기 극복에 대한 낙관적 시각이 조심스럽게 확산되는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 기조의 변화를 모색할 필요성이 제기
 - 정부의 재정 투입 및 적극적인 개입을 통한 지원 일변도의 초기 대응에서 점차 위기 이후의 새로운 경쟁질서에 대비하는 정책적 대응을 강조하는 흐름이 나타나기 시작
 - 시장기능에 별다른 기대를 갖지 못했던 상황이 부분적으로 개선됨에 따라 시장기능의 활용도를 제고할 필요성도 제기
- 중소기업 정책금융 지원도 여타 위기 대응 조치들과 마찬가지로 상황과 여건 변화에 따른 발전적 진화가 필요하며, 위기 이후의 정책 비용 부담 문제도 검토할 필요
- 본고는 지난 6개월여 동안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선제적 대응조치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던 중소기업 정책금융 지원의 현황을 점검·평가하고, 향후 효율적인 재정운용방향을 모색

II. 중소기업 정책금융 지원현황 및 평가

1. 중소기업 금융지원의 주요 내용 및 특징

□ 은행을 통한 지원

-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은행의 유동성 제약을 해소하는 한편,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금융지원 여력 확충을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도모
 - 주요국과의 통화스왑협정 체결, 국내은행의 대외채무 지급 보증 등을 통해 외화 유동성의 불안요인을 해소
 -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금융지원 원활화를 위한 외화 유동성 공급 확대, 총액대출한도 확대(6.5조원→10조원) 및 지원금리 인하
 - 국책은행(산은, 기은)에 대한 출자 지원
 - * 2009년 출자예산 : 산은 9,000억원, 기은 8,000억원
- 정부 지원과 연계하여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정부와 은행 간 MOU 체결 및 이행 감독
 - 정부는 은행에 대한 유동성 지원과 연계하여 은행들로 하여금 중소기업 금융지원을 독려하기 위해 중소기업 대출규모 확대, 만기도래 대출(160조원)의 만기 연장, 중소기업 의무대출비율 상향 조정 등의 내용을 포함한 MOU를 체결
 - 은행들은 MOU에 포함된 중소기업 금융지원 실적을 월별로 보고하고, 금융당국은 이행 상황을 감독

□ 신용보증 지원

- 금융위기에 따른 일시적인 자금시장 경색이 중소기업 부도로 이어지는 사태를 차단하기 위해 긴급 보증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지원요건 완화를 통해 수혜기업의 범위를 확대

- 2009년 신·기보의 보증공급 규모를 55.5조원으로 확대하고, 지원등급 하향 조정 등 지원요건을 대폭 완화
- 또한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기능이 원활히 작동하지 않은 것에 대응하여 보증비율을 기존의 85%에서 95%(일반 중소기업)~100%(수출중소기업)으로 확대
- 이밖에 보증 만기 연장, 신규보증공급 확대, 지원절차 간소화 등을 시행

□ 정책자금 지원

- 은행 활용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한 원활한 자금지원을 위해 정책자금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
- 2009년 예산증액 및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약 6조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지원

<표 II-1>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실적

단위: 억원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지원 규모	21,324	26,603	26,265	31,387	28,328	28,308	31,530	58,555

자료: 중소기업청

주: 중소기업청 소관 정책자금 기준(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제외)

- 지원대상 및 지원조건 완화를 통해 자금사정 악화 중소기업에 신속 지원
- 부채비율 요건 완화, 지원한도 증액, 비재무평가비율 상향 조정, 지원절차 신속화 등을 시행

□ 특징

- 과감하고 신속한 선제 대응을 통해 금융위기의 실물 파급을 사전에 적극 차단하기 위해 중소기업 금융지원을 전방위적으로 추진
- 신용보증기금, 국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금융기관까지 포함한 전방위적 지원체계를 통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적극 도모

- 과감한 재정 투입 및 공적 지원기구 활용을 통해 위축된 시장기능을 적극 보완
 - 적극적인 재정 투입과 공적 지원기구의 신속한 집행력을 활용하여 위기 초기에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시장기능을 적극 보완
- 금융위기의 실물 파급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선제적 지원에 초점

2. 중소기업 신용보증 지원

□ 보증공급 현황

- 보증공급 목표 이행 상황
 - 2009년 5월 기준으로 신보와 기보는 각각 연간 목표치의 97.7%, 92.6%를 달성하여, 이러한 추세라면 8월 이전에 목표를 달성할 전망
 - 한편, 신, 기보의 2009년 목표치는 2007년 대비 41.2%, 2008년 32.1% 증가한 규모임.
- 보증공급 규모 추이
 - 양 기관의 2009년 공급잔액 목표 55.5조원은 2008년말 공급잔액(실적) 대비 29.1% 증가한 규모이며, 절대규모로는 12.5조원 증가한 것임.
 - 2008년의 경우 2007년에 비해 공급잔액이 3.2조원 증가했던 것과 비교하면 증가규모가 거의 4배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보증공급이 엄청난 규모로 확대되었음을 시사
 - * 외환위기 당시 1998년의 보증공급 규모는 32.8조원으로 1997년의 17.1조원에 비해 14.3조원이 증가
 - 양 기관의 2009년 공급잔액 목표 55.5조원은 종전의 최대 보증공급 규모인 2003년의 49.5조원보다 6조원 더 많은 수준

<표 II-2> 보증잔액 목표 및 실적 추이

단위: 억원

구 분		2007	2008	2009.5
신보	잔액목표	280,000	295,000	384,000
	잔액실적	285,422	303,868	375,313
기보	잔액목표	110,000	125,000	171,000
	잔액실적	112,459	125,935	158,311

자료: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 보증 운용 현황

- 보증 운용 현황을 보면, 양 기관 모두 2009년 5월말 현재 비교적 안정적인 운용 기조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II-3> 보증 운용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2006	2007	2008	2009. 5
신보	보증잔액	285,243	285,422	303,868	375,313
	부실 순증액	12,728	11,049	15,337	8,455
	부실 순증률	4.5	3.9	5.0	5.4
	대위변제율	3.2	2.5	3.5	4.2
	기본재산	21,263	24,154	26,546	37,054
	운용배수	13.4	11.8	11.4	10.1
기보	보증잔액	111,508	112,459	125,935	158,311
	부실 순증액	6,791	6,050	7,679	3,581
	부실 순증률	6.1	5.4	6.1	5.5
	대위변제율	4.3	4.1	3.8	5.3
	기본재산	11,526	14,462	17,297	19,932
	운용배수	9.7	7.8	7.3	7.9

자료: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 부실 순증률에서도 2008년에 전년대비 소폭 상승하였으나, 올해 들어 5월말까지 증가율이 둔화된 것으로 나타남.

* 이는 2008년 이전 보증 공급분의 부실을 반영한 수치로 현 시점에서 큰 의미는 없음.

- 또한 정부의 출연 확대를 통해 기본재산이 확충됨에 따라 운용배수도 2009년 5월말 현재 신보 10.1배, 기보 7.9배로 추가적인 보증공급 여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나, 이는 향후 부실 발생 속도와 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임.

○ 월별 보증 신청 건수 및 금액 추이

- 지원수요의 변화 추이를 보면, 올해 3월까지 급증세를 보이다가, 4월부터 보증신청 건수와 금액 모두 증가세가 둔화되는 모습

- 증가세 둔화의 정도가 상당히 크다는 점에서, 조심스럽지만 향후 보증공급 규모 및 속도 조절 여지를 시사

<표 II-4> 월별 보증신청 건수 및 금액 추이(2008. 10 - 2009. 5)

단위: 건, 억원

		08.10	08.11	08.12	09. 1	09. 2	09. 3	09.4	09.5
신보	건수	8,192	8,346	8,855	9,067	10,072	18,858	13,053	9,410
	금액	20,366	33,964	32,315	24,780	25,569	85,858	38,015	28,906
기보	건수	1,948	1,988	2,210	1,724	3,778	4,230	3,037	2,589
	금액	7,128	7,912	8,937	5,814	15,965	20,648	15,661	12,031

자료: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 지원대상 및 조건 변경에 따른 보증 운용 내역

○ 보증만기 연장

- 금융위기에 따른 선제적 대응조치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 보증만기 연장의 경우 예년 수준에 비해 큰 폭의 증가율을 보이며 비교적 순조롭게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

- 다만, 만기연장 부분은 보증운용의 위험 조절 여지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

<표 II-5> 만기연장 실적 추이(금액 기준)

단위: 억원, %

구 분		2007	2008	09. 1~5월
신보	만기도래	222,946	200,471	83,037
	만기연장	199,799	172,183	77,242
	연장율	89.6	85.9	93.0
기보	만기도래	81,294	83,446	33,853
	만기연장	65,057	70,503	29,901
	연장율	80.0	84.5	88.3

자료: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 신규보증 공급 실적

- 금융위기에 따른 대응조치의 일환으로 신규 보증공급 확대를 시행하고 있는 바, 2009년 5월말 현재 건수 기준으로 신보와 기보 각각 2008년의 95.9%, 81.6% 수준

<표 II-6> 보증비율별 신규보증 건수 추이

단위: 건, %

구 분		2007	2008	09. 1	09. 2	09. 3	09. 4	09. 5
신보	신규보증 전체	47,360	61,803	3,849	14,757	17,608	13,206	9,594
	전액보증 (비중)	8,323 (17.6)	17,048 (27.6)	1,296 (33.7)	5,392 (36.5)	10,413 (59.1)	9,909 (75.0)	7,252 (75.6)
	부분보증 (비중)	39,037 (82.4)	44,755 (72.4)	2,553 (66.3)	9,365 (63.5)	7,195 (40.9)	3,297 (25.0)	2,342 (24.4)
기보	신규보증 전체	12,731	15,014	994	2,787	3,700	2,675	2,096
	전액보증 (비중)	987 (7.8)	901 (6.0)	180 (18.1)	797 (28.6)	2,077 (56.1)	1,774 (66.3)	1,327 (63.3)
	부분보증 (비중)	11,744 (92.2)	14,113 (94.0)	814 (81.9)	1,990 (71.4)	1,623 (43.9)	901 (33.7)	769 (36.7)

자료: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 한편, 올해 한시적으로 보증비율을 종전의 85%에서 95%(일반 중소기업)~100%(수출 중소기업)로 상향 조정하였는데, 양 기관 모두 3월부터 전액보증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신규보증 금액의 경우 건수와 달리 양 기관 모두 5월말 현재 2008년 수준을 상회
- 신규보증 금액의 보증비율별 집행 추이에서는 건수와 마찬가지로 양 기관 모두 3월부터 전액보증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표 II-7> 보증비율별 신규보증 금액 추이

단위: 억원

구 분		2007	2008	09. 1	09. 2	09. 3	09. 4	09. 5
신보	신규보증 전체	85,027	93,255	5,407	22,441	30,469	25,216	19,394
	전액보증 (비중)	23,905 (28.1)	29,065 (31.2)	1,449 (26.8)	7,459 (33.2)	18,763 (61.6)	19,003 (75.4)	14,202 (73.2)
	부분보증 (비중)	61,122 (71.9)	64,190 (68.8)	3,958 (73.2)	14,982 (66.8)	11,706 (38.4)	6,213 (24.6)	5,192 (26.8)
기보	신규보증 전체	37,418	44,383	3,072	9,085	14,842	11,331	8,438
	전액보증 (비중)	6,096 (16.3)	4,842 (10.9)	537 (17.5)	3,115 (34.3)	9,883 (66.6)	8,296 (73.2)	5,749 (68.1)
	부분보증 (비중)	31,322 (83.7)	39,541 (89.1)	2,535 (82.5)	5,970 (65.7)	4,959 (33.4)	3,035 (26.8)	2,689 (31.9)

자료: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 신용등급별 보증 현황의 시기별 비교

- 정부는 금융위기 여파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금융 접근성 제고를 위해 신용보증 지원등급을 하향 조정
- 신보의 지원등급은 종전의 KC4(B) 이상에서 3단계 아래인 KD3(CCC)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였으며, 기보의 경우 종전의 B 이상에서 2단계 아래인 CC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였음.

- 신규공급 기준으로 지원등급의 하향 조정에 따른 추가 지원등급의 수혜 비중을 보면, 신보의 경우 2월에 소폭 증가하였으나, 3월부터 추가 지원 등급의 수혜비중이 오히려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기보의 경우 2월부터 미세하나마 증가 추세를 지속한 것으로 나타남.
- 이는 보증공급 규모가 늘어난 데 따른 측면이 부분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전반적으로 지원등급 하향 조정의 효과가 기대만큼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됨.

<표 II-8> 지원등급 하향에 따른 추가 지원등급의 수혜비중(신규공급 기준)

단위: 억원, %

신용 등급	'08년		2009.1		2009.2		2009.3		2009.4		2009.5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신보	KD1 (B-)	5,494	5.6	330	6.1	1,494	6.7	1,724	5.7	1,320	5.2	845	4.4
	KD2 (CCC+)	8,549	8.7	421	7.8	1,935	8.6	2,336	7.7	1,583	6.3	1,053	5.4
	KD3 (CCC)	4,102	4.2	188	3.5	794	3.5	932	3.1	628	2.5	399	2.1
	합계	18,145	18.5	939	17.4	4,223	18.8	4,992	16.5	3,531	14.0	2,297	11.9
기보	CCC	1,047	2.4	19	0.7	162	1.8	414	2.8	345	3.1	305	3.6
	CC	-	0.0	1	0.0	6	0.1	28	0.2	33	0.3	8	0.1
	합계	1,047	2.4	20	0.7	168	1.9	442	3.0	378	3.4	313	3.7

자료: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 고액보증 현황

- 정부는 신용보증 지원 확대조치의 일환으로 지원한도를 확대하였는데, 일반적으로 고액보증으로 분류되는 15억원 이상의 보증비율은 신보의 경우 2008년의 21.2%에서 올해 5월말 현재 22.7%로 소폭 증가하였으며, 기보의 경우 31.3%에서 37.5%로 상대적으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임.
- 2008년말 대비 고액보증 증가액의 절대규모는 5월말 현재 신보가 2.1조 원, 기보가 2.0조원 수준임.

- 보증한도를 확대한 정책 취지는 기존 보증 수혜기업이 금융위기로 인해 경영위험이 증대한 경우 추가 지원을 통해 기업의 경영 위험 완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보증 사고위험도 줄이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 반면, 고액보증은 집행 측면에서 보면 기존에 검증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추가 지원 여지를 제공하기 때문에 집행 편의성을 활용할 여지가 있으며, 위험도 측면에서는 지원대상의 위험도는 상대적으로 낮으나 부실 발생시 재정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소로 작용할 소지가 있음.

<표 II-9> 고액보증 잔액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08년	'09.1	'09.2	'09.3	'09.4	'09.5
신보	15억원 초과	64,440	63,777	68,426	74,536	80,133	85,165
	(30억원 초과)	27,681	26,729	28,004	31,143	34,126	35,829
	15억원 이하	239,428	241,006	254,038	270,472	282,334	290,148
	합계	303,868	304,783	322,464	345,008	362,467	375,313
기보	15억원 초과	39,312	40,159	43,567	50,498	55,463	59,306
	(30억원 초과)	15,469	15,978	17,544	22,082	24,975	27,216
	15억원 이하	86,434	86,833	89,619	93,917	96,843	98,842
	합계	125,746	126,992	133,186	144,415	152,306	158,148

자료: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 정책 위험도 현황 및 추이

○ 보증 부실률 추이

- 보증공급 규모의 대폭적인 확대에 따라 향후 신용보증 지원의 부실에 의한 재정부담 문제는 잠재적 현안 중의 하나라 할 수 있음.
- 기본적으로 공급규모 확대가 시행된 지 얼마되지 않은 시점에서 부실 정도를 평가하는 것은 실질적 의미를 갖는다고 보기는 어려움.
- * 신용보증 공급 시점과 부실발생 시점 사이에는 일정한 시차가 존재하며 부실 발생 요인이 공급 확대에만 기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임.

- 다만, 공급확대가 어느 정도 진행된 시점부터 부실 발생 요인을 점검하여 이를 추가적인 신용보증 공급 및 속도 조절시 선제적으로 반영할 수 있을 것임.
- 5월말 현재 신용보증의 부실률은 기 공급분의 부실이 주로 반영된 것이라 하더라도 예상보다 낮은 수준인 것으로 파악됨.
- 그러나 보증공급의 절대규모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에 부실의 절대규모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추세라면 절대규모면에서 올해 말에는 적어도 2008년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됨.

<표 II-10> 보증 부실률(누적 기준)

단위: 억원, %

구 분		2007	2008	09. 1	09. 2	09. 3	09. 4	09. 5
신보	금액	11,049	15,337	2,248	4,230	5,799	7,273	8,455
	부실률	3.9	5.0	8.7	8.1	6.8	6.1	5.4
기보	금액	6,050	7,679	887	1,645	2,516	3,143	3,581
	부실률	5.4	6.1	8.2	7.6	7.1	6.3	5.5

자료: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 향후 부실률에 대한 전망

- 향후의 부실률 수준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신용보증 확대조치가 영향을 미친 결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신용보증의 추가 출연 소요, 신규 보증공급 여력 등을 규정하는 요소임.
- 신보와 기보가 자체적으로 추정한 부실률 전망치에 따르면, 올해 말과 내년에 부실 순증률이 2008년 수준을 크게 상회할 것으로 예상됨.
- 정부의 출연 확대에 의해 기본재산이 크게 확충된 상황에서 절제된 수준의 운용배수를 유지하고 있음에 따라 현재로서는 2010년의 신규 보증공급에 차질을 줄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파악됨.
- * 다만, 경기적 요인에 의해 부실률이 예상치를 상회하거나, 향후 재정운용 기조에 의해 출연 지원이 여의치 않을 수 있을 것임.

<표 II-11> 부실률 전망(기관 추정치)

단위: 억원, %

구 분	신보		기보	
	2009년말	2010년말	2009년말	2010년말
보증잔액	390,000	375,000	171,000	171,000
부실 순증액	35,107	25,500	18,810	18,426
부실 순증률	9.0	6.8	11.0	11.1
운용배수	11.8	13.0	10.0	11.5

자료: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 적정 보증총량

- 향후 적정보증 총량을 어느 수준으로 보는가에 따라 보증공급규모의 연착륙 조정 속도가 결정
- 신보와 기보가 자체 추정한 적정 보증총량 수준을 기준으로 할 경우 향후 보증규모의 정상화에는 5~6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 * 외환위기 이후 보증총량의 연착륙 조정은 정부 출연 축소 등을 통해 2001년부터 시도되었으나, 경기요인, P-CBO 등의 변수로 인해 실질적으로는 2004년부터 역착륙 기조가 반영
- 여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된 변수들로는 해지 등을 통한 자연적인 보증 감소분, 기존 보증에 대한 증액 공급분, 신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신규 공급분 등이 있음.

<표 II-12> 적정 보증총량(잔액) 규모 전망(기관 추정치)

단위: 억원

구 분	2009	2010	2011
신보 자체 추정	390,000	375,000	360,000
기보 자체 추정	171,000	171,000	160,000

자료: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3.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 지원규모 및 실적

- 금융위기로 인해 중소기업들의 은행 활용이 어려워짐에 따라 추경편성 등으로 올해 대폭 증액된 정책자금 지원규모는 올해말까지 약 6조원 수준에 달할 전망

- 이는 예산규모 기준으로 2008년 대비 85.7% 증가한 것이며, 2009년 당초 예산규모에 비해서도 37.6% 증액된 것임.

<표 II-13> 중진공 정책자금 예산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08예산	'09예산						
		당초 (A)	정부증액 (B)	정부안 (C=A+B)	국회증감 (D)	추경예산 (E=C+D)	당초대비 (F=E-A)	증가율 (F/A)
□ 금융지원	2,975	11,827	22,000	33,827	0	33,827	22,000	186.0
○ 신용보증기관 출연	2,700	11,000	16,000	27,000	0	27,000	16,000	145.5
○ 지역신용보증재단 재보증	180	600	2,000	2,600	0	2,600	2,000	333.3
○ 지역신용보증지원	0	0	3,700	3,700	0	3,700	3,700	순증
○ 매출채권보험계정출연	95	227	300	527	0	527	300	132.2
□ 중진기금용자사업	31,530	42,555	15,000	57,555	1,000	58,555	16,000	37.6
○ 긴급경영안정	4,313	7,000	10,000	17,000	△2,000	15,000	8,000	114.3
○ 소상공인지원	2,875	5,000	5,000	10,000	0	10,000	5,000	100.0
○ 창업활성화	7,400	10,000	0	10,000	1,500	11,500	1,500	15.0
○ 개발기술사업화	1,200	1,580	0	1,580	300	1,880	300	19.0
○ 신성장기반	13,211	11,900	0	11,900	1,200	13,100	1,200	10.1
○ 기타	2,531	7,075	0	7,075	0	7,075	0	0.0

자료: 중소기업청

- 지원실적을 보면, 2009년 5월말 현재 이미 2008년 전체 지원실적을 크게 상회한 것으로 나타남.
 - 2005년의 정책자금 개편방안 시행 이후 2006년 2조 7,550억원에서 2007년에 2조 7,213억원으로 소폭 감소하였으나, 2008년 3조 2,012억원으로 다시 증가
- 금융위기 이후의 상황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2009년 들어 지원 신청건수가 급증세를 보여 5월말까지 전년 전체 대비 65.0% 증가한 13,747건에 달하였으며, 지원 신청금액도 전년 전체 대비 51.5% 증가함.
 - 특히 직접대출 신청건수 및 신청금액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증가함.
 - 2009년 1~5월 기간 중 직접대출의 신청건수는 전체의 68.5%, 금액은 전체의 55.8%를 차지하였으며, 신청건수는 전년 전체 대비 68.1%, 신청금액은 62.5% 각각 증가함.
- 지원신청 대비 지원실적을 보면, 직접대출보다는 대리대출의 지원승인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직접대출의 경우 2009년 1~5월중 지원 신청에서 건수 68.5%, 금액 55.8%의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지원실적에서는 건수 60.5%, 금액 42.0%를 점유
 - 반면, 대리대출의 경우 2009년 1~5월중 지원 신청에서 건수 31.5%, 금액 44.2%의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지원실적에서는 건수 39.5%, 금액 58.0%를 점유

<표 II-14> 정책자금 집행현황

단위 : 건, 억원

구분		신청		지원실적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06년	직대	6,697	27,814	3,729	12,173
	대리	2,685	20,451	2,471	15,377
	소계	9,382	48,265	6,200	27,550
2007년	직대	5,443	22,689	3,224	11,250
	대리	2,947	23,843	2,622	15,963
	소계	8,390	46,532	5,846	27,213
2008년	직대	5,602	22,297	4,600	14,648
	대리	2,732	20,557	2,993	17,364
	소계	8,334	42,854	7,593	32,012
2009년 5월말	직대	9,415	36,239	5,769	15,384
	대리	4,332	28,693	3,767	21,217
	소계	13,747	64,932	9,536	36,601

자료: 중소기업진흥공단

주: 지원실적은 지원결정액 기준

□ 자금용도별 지원현황

- 자금용도별로는 금융위기 여파로 인한 경기 침체를 반영하여 운전자금 지원이 대폭 증가하여 이전의 시설자금 위주의 정책자금 지원구조가 역전된 모습
 - 2007년까지 정책자금의 시설자금 지원비중이 60% 이상이었으나, 2008년 58.4%로 비중이 하락한 데 이어 2009년 1~5월 기간에는 31.3%로 큰 폭의 하락세를 보임.
 - 반면에, 운전자금의 지원비중은 2007년까지 36% 정도였던 것이 2008년 41.6%로 비중이 상승한 데 이어 2009년 1~5월 기간에는 68.7%로 큰 폭의 상승세를 나타냄.

<표 II-15> 자금용도별 지원실적

단위: 억원

구분		시설자금	운전자금	전체
2006년	실적	15,189	8,743	23,932
	비중(%)	63.5	36.5	100.0
2007년	실적	15,763	9,040	24,803
	비중(%)	63.6	36.4	100.0
2008년	실적	15,395	10,954	26,349
	비중(%)	58.4	41.6	100.0
2009년 5월말	실적	7,511	16,489	24,000
	비중(%)	31.3	68.7	100.0

자료: 중소기업진흥공단

□ 담보별 지원현황

- 담보별로는 직접대출을 중심으로 순수 신용대출 비중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2009년 5월말 현재 직접대출의 경우 2008년에 비해 담보부 대출비중은 23.7%에서 6.9%로 크게 줄어든 반면, 순수 신용대출 비중은 2008년의 56.2%에서 81.3%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남.
 - 이는 담보력이 없고 상대적으로 낮은 신용도의 중소기업들을 중심으로 직접대출 지원이 늘어난 측면을 반영한 것으로 파악됨.
- 한편, 그 동안의 정책자금 운용체계 개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책자금 용자와 신용보증의 결합 지원이 이중 지원이라는 논란이 적지 않았음. 이를 감안할 때, 중진공 정책자금에서 보증서부 대출이 줄어드는 추세에 있기는 하지만 10%를 상회한다는 점은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직접대출의 경우 보증서부 대출 비중이 2006년 23.8%에서 2007년 20.8%, 2008년 20.1%, 올해 1~5월중 11.8%로 지속적인 하락 추세를 보인 반면,

대리대출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는 하락 추세를 보였으나 올해 1~5월 중 보증서부 대출 비중이 미세하나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표 II-16> 담보별 지원실적

단위: 억원, %

구분		직접대출				대리대출			
		신용	보증서	부동산	계	신용	보증서	부동산	계
2006년	실적	5,522	2,493	2,478	10,493	1,172	2,057	10,211	13,440
	비중	52.6	23.8	23.6	100.0	8.7	15.3	76.0	100.0
2007년	실적	4,937	2,228	3,524	10,689	1,545	1,721	10,847	14,113
	비중	46.2	20.8	33.0	100.0	10.9	12.2	76.9	100.0
2008년	실적	7,275	2,602	3,076	12,953	1,427	1,568	10,402	13,397
	비중	56.2	20.1	23.7	100.0	10.7	11.7	77.6	100.0
2009년 5월말	실적	9,988	1,450	843	12,281	1,167	1,391	9,161	11,719
	비중	81.3	11.8	6.9	100.0	10.0	11.9	78.1	100.0

자료: 중소기업진흥공단

□ 종업원규모별 지원현황

- 종업원규모별로는 건수, 금액 모두 50인 이하의 소기업층에 대한 지원비중이 압도적인 가운데, 2009년 1~5월중에도 소기업층에 대한 지원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2009년 1~5월 기간중 50인 이하에 대한 지원비중은 건수 85.6%, 금액 78.6%로 각각 2008년 전체의 81.7%, 74.2%를 상회함.
- 이는 위기 국면에서 소기업층의 신용경색이 상대적으로 더 심하다는 점에서 적정한 집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됨.
 - 정책자금의 소기업에 대한 지원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은 정책자금의 역할이 여타 정책금융에 비해 차별화되는 부분이라 할 수 있음.

<표 II-17> 종업원규모별 지원실적

단위: 억원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5월말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		%		%		%		%		%		%		%
5인 이하	908	15.7	2,685	11.2	949	16.9	2,830	11.4	1,046	15.8	3,491	13.2	1,251	16.2	2,892	12.1
20인 이하	2,262	39.2	7,443	31.1	2,159	38.5	8,211	33.1	2,387	36.0	7,967	30.2	3,250	42.0	8,488	35.4
50인 이하	1,633	28.3	7,479	31.2	1,527	27.2	7,412	29.9	1,987	29.9	8,090	30.8	2,113	27.3	7,480	31.2
소계	4,803	83.3	17,607	73.6	4,635	82.6	18,453	74.4	5,420	81.7	19,548	74.2	6,614	85.6	18,860	78.6
100인 이하	614	10.6	3,609	15.1	636	11.3	3,840	15.5	771	11.5	4,020	15.2	734	9.5	3,276	13.7
300인 이하	325	5.6	2,477	10.3	324	5.8	2,335	9.4	430	6.5	2,635	10.0	369	4.8	1,783	7.4
300인 초과	27	0.5	240	1.0	17	0.3	175	0.7	17	0.3	146	0.6	14	0.2	80	0.3
소계	966	16.7	6,326	26.4	977	17.4	6,350	25.6	1,218	18.3	6,801	25.8	1,117	14.4	5,139	21.4
합계	5,769	100	23,933	100	5,612	100	24,803	100	6,638	100	26,349	100	7,731	100	23,999	100

자료: 중소기업진흥공단

□ 업력별 지원현황

- 업력별로는 2009년 1~5월중 건수, 금액 모두 5년 미만의 창업 내지 창업 초기기업의 비중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 2009년 1~5월 기간중 업력 5년 미만 기업에 대한 지원비중은 건수 33.3%, 금액 30.7%로 각각 2008년 전체의 38.8%, 36.6%에 비해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업력 1년 미만의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비중의 하락 폭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창업기업의 경우 지원대상 선별에 있어 기술적으로 용이하지 않다는 측면과 함께 경기 요인이 겹친 결과로 보임.

<표 II-18> 업력별 지원실적

단위: 억원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5월말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		%		%		%		%		%		%		%
1년 미만	532	9.2	2,541	10.6	549	9.8	2,650	10.7	728	11.0	3,635	13.8	580	7.5	2,072	8.6
3년 미만	873	15.1	2,600	10.9	836	14.9	3,030	12.2	995	15.0	3,057	11.6	1,080	14.0	2,891	12.0
5년 미만	837	14.5	3,056	12.8	702	12.5	2,915	11.8	853	12.9	2,944	11.2	915	11.8	2,413	10.1
소계	2,242	38.9	8,197	34.2	2,087	37.2	8,595	34.7	2,576	38.8	9,636	36.6	2,575	33.3	7,376	30.7
7년 미만	751	13.0	2,894	12.1	702	12.5	2,946	12.2	645	9.7	2,398	9.1	915	11.8	2,561	10.7
10년 미만	781	13.5	3,315	13.9	936	16.7	4,179	16.8	1,061	16.0	4,116	15.6	1,463	18.9	4,238	18.9
15년 미만	858	14.9	3,837	16.0	799	14.2	3,579	14.4	971	14.6	3,931	14.9	1,258	16.3	4,161	17.3
20년 미만	607	10.5	2,967	12.4	550	9.8	2,580	10.4	625	9.4	2,488	9.4	718	9.3	2,448	10.2
20년 이상	530	9.2	2,723	11.4	538	9.6	2,924	11.8	760	11.4	3,780	14.3	802	10.4	3,215	13.4
소계	3,527	61.1	15,736	65.8	3,525	62.8	16,208	65.3	4,062	61.2	16,713	63.4	5,156	66.7	16,623	69.3
합계	5,769	100	23,933	100	5,612	100	24,803	100	6,638	100	26,349	100	7,731	100	23,999	100

자료: 중소기업진흥공단

□ 정책 위험도

○ 신용등급별 지원 현황의 시기별 비교

- 중진공의 직접대출시 재무평가 결과에 따른 신용등급별 지원비중을 보면 재무여건 취약업체로 분류되는 F4등급 이하에 대한 지원비율(금액 기준)이 2007~2008년 기간의 42.8%에서 2009년 1~5월중에는 59.6%로 크게 증가함.

- 재무여건이 상대적으로 더 취약한 F5등급 이하에 대한 지원비율(금액 기준)은 2007~2008년 기간의 16.8%에서 2009년 1~5월중에는 24.5%로 증가함.

<표 II-19> 직접대출 재무평가 현황 비교

단위: 건, 백만원

< 2007-2008년 >					< 2009.1-5 >				
재무 등급	건수	건수 비율	지원금액	금액 비율	재무 등급	건수	건수 비율	지원금액	금액 비율
F4+	1,044	12.0%	195,342	12.7%	F4+	385	13.6%	91,916	13.3%
F4	823	9.5%	131,859	8.6%	F4	382	13.5%	93,784	13.6%
F4-	465	5.4%	71,359	4.7%	F4-	238	8.4%	56,535	8.2%
F5+	1,563	18.0%	202,594	13.2%	F5+	299	10.6%	81,040	11.7%
F5	228	2.6%	26,215	1.7%	F5	165	5.8%	39,167	5.7%
F5-	231	2.7%	26,349	1.7%	F5-	162	5.7%	40,889	5.9%
F6	8	0.1%	2,502	0.2%	F6	32	1.1%	8,053	1.2%

자료: 중소기업진흥공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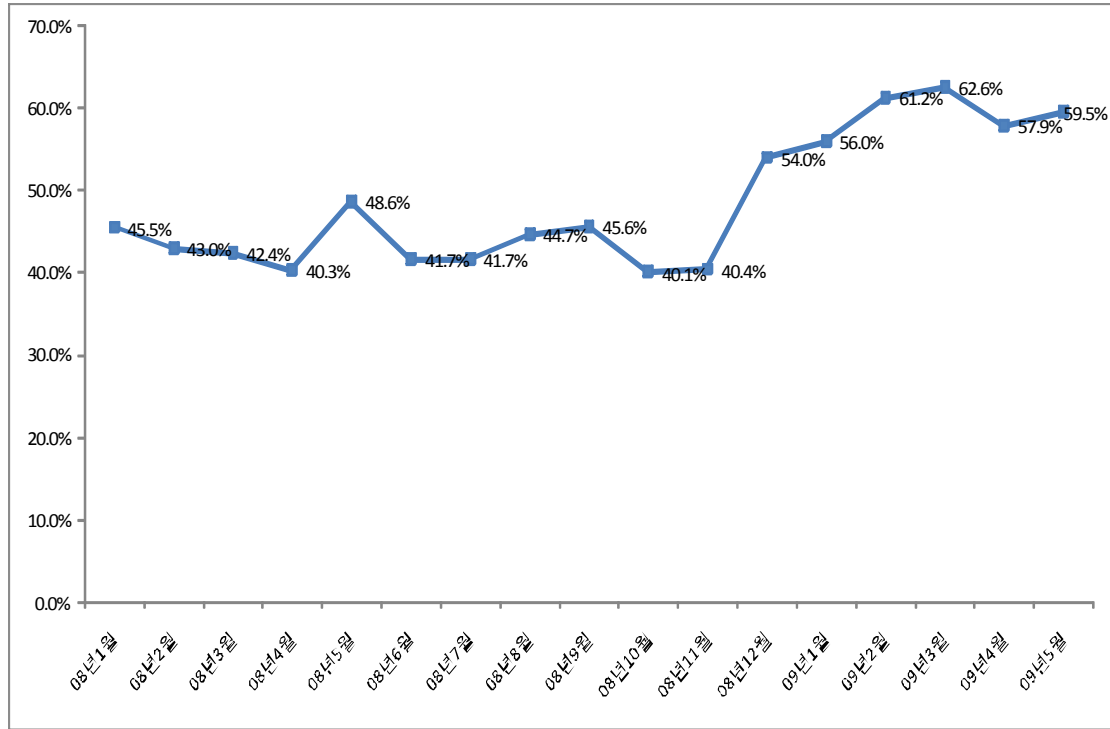
주: 1) '07~'08년 재무평가생략 6,861건, 612,914백만원이며, '09년 재무평가생략 2,548건, 537,763백만원임.

2) 각 자료 공히 중진공 직접대출, 재무등급이 생성된 순수업체 수 기준

- 금융위기 전후의 재무여건 취약업체인 F4등급 이하에 대한 지원비율(금액 기준) 추이를 보면, F4등급 이하에 대한 지원비율이 2008년 12월부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9년 3월의 경우 동 비율이 62.6%까지 상승함.
- 2008년 11월 40.4%였던 F4등급 이하 지원비율은 동년 12월에 54.0%로 급증한 데 이어 3월까지 증대 추세를 지속하다 4월 57.9%, 5월 59.5% 등으로 3월 수준을 약간 하회
- 물론 중진공의 신용평가 방식이 재무평가뿐만 아니라 비재무평가를 병행하며 비재무평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재무평가 결과만으로 정책 위험도를 평가할 수는 없음.

-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향후 정책 위험도의 변화 추이에 적지 않은 시사
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으며, 면밀한 관찰이 요구됨.

<그림 II-1> 직접대출 F4단계 이하 재무여건 취약업체의 월별 지원현황(금액 기준)



자료: 중소기업진흥공단

주: 중진공 재무 6단계 체계 중 4단계 이하 기준이며, 창업자금 등 재무등급 평가생략업체는 제외

- 2009년 1~5월 기간중 F4등급 이하에 대한 직접대출의 담보별 지원 현황 (금액 기준)을 살펴보면, 부동산 담보부 대출비중은 4.8%에 불과한 반면, 순수 신용대출비중은 82.9%에 달한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창업자금이나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이 주된 대상인 재무평가 생략업체에 대한 순수 신용대출비중도 80.4%에 달함.
- 재무평가 위주의 기업평가로 인해 지원받지 못하는 중소기업들의 지원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재무여건 취약업체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부실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서 사후관리에 유의할 필요

<표 II-20> 직접대출의 담보별 지원 현황(2009.1~5, 금액 기준)

단위: 백만원

재무등급	보증서	부동산	신용	소계	전체 재무평가업체 중 비중
F4+	7,545	3,405	80,966	91,916	F4단계 이하 59.6%
F4	11,024	6,363	76,397	93,784	
F4-	5,839	1,353	49,342	56,535	
F5+	9,782	5,779	65,479	81,040	
F5	5,676	300	33,191	39,167	
F5-	8,901	2,126	29,862	40,889	
F6	1,820	500	5,733	8,053	

자료: 중소기업진흥공단

- 이밖에 정책 위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지원 요건의 완화를 들 수 있음.
 - 정부는 금융위기 이후 은행 활용이 어려운 기업을 원활히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융자한도, 기업평가 기준 및 절차 등 지원요건 전반을 완화하여 적용하고 있음.
 - 이중 핵심적 요소로는 지원한도 상향 조정, 기업평가 기준 및 절차의 완화 및 간소화 등을 들 수 있으며, 정책 위험도를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표 II-21> 금융위기에 따른 정책자금 용자조건 변경의 주요 내용

구분	금융위기 이전	금융위기 후
신청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자제한 부채비율 적용(업종별 200%~5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자제한 부채비율 배제('08.11.17~12.31한시) ▪ 용자제한 부채비율 완화(300%~600%, '09.1~) * 긴급경영안정자금에 대한 용자제한 부채비율 배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자제한 부채비율 산정시 예외 : 당해연도 자본증자만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자제한 부채비율 산정시 예외 : 당해연도 자본증자, R&D투자·시설투자에 대한 부채비율산정시 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장 또는 코스닥 등록기업 지원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생특례지원사업에 한해 상장 또는 코스닥 등록기업 지원허용('08.11.17~12.31한시) ▪ 긴급경영안정자금 중 일시적 경영애로기업에 한해 상장 또는 코스닥 등록기업 지원허용('09.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2년이내 공모회사채 발행기업 지원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허용('09.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업의 경우 무등록공장 지원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허용('09.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매업, 육상여객운송, 교육서비스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허용('09.1~)
용자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잔액한도 : 수도권 40억원, 지방 45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잔액한도 수도권 50억원, 지방 60억원('09.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별 한도 : 창업 20억원, 개발기술사업화 10억원, 사업전환 30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별 한도 : 창업 30억원, 개발기술사업화 20억원, 사업전환 40억원('09.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전자금 한도 : 개발기술사업화 3억원, 시운전자금 5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전자금 한도 : 개발기술사업화 5억원('09.1~) 시운전자금 5억원('09.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금융 실적기준 회전한도 : 5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금융 실적기준 회전한도 : 10억원('09.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전자금 비중 : 3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전자금 비중 : 60%이상
기업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재무 평가비중 : 60%이상 * 창업 3년미만 100%, 자산 10억미만 80%, 기타 6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재무 평가비중 : 100%('08.11.17~12.31한시) ▪ 비재무 평가비중 : 80%이상('09.1~) * 창업 3년미만 100%, 창업3년~5년미만 90%, 자산 10억 미만 90%, 기타 80%

구분	금융위기 이전	금융위기 후
기업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접대출 중 신용대출 지원기준 * 창업초기기업 육성 : CC(3년이상), C+(3년미만) * 신성장기반자금 : CC * 개발기술사업화자금 : C- * 긴급경영안정자금(일반경영안정) : CC *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 경영애로) : C- *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복구) : D+ * 긴급경영안정자금(수출금융) : C+(계약기준), CC(실적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접대출 중 신용대출 지원기준 완화(1단계 하향) ('08.11.17~12.31한시적용) * 창업초기기업 육성 : CC-(3년이상), C(3년미만) * 신성장기반자금 : CC- * 개발기술사업화자금 : D+ * 긴급경영안정자금(일반경영안정) : CC- *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경영애로) : D+ *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복구) : D * 긴급경영안정자금(수출금융) : C(계약기준), CC-(실적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산 재무제표만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결산 재무제표 인정('09.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타당성 평가 심사기준 * 약식심사 : 대리대출 * 표준심사 : 직접대출 담보부 및 신용 4억원 미만 * 심층심사 : 신용대출 4억원 이상업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타당성 평가 심사기준 * 약식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리대출, 직접대출 담보부 기업 - 직접대출 신용 3억원 이하 기업 - 긴급경영안정자금중 재해피해기업 - 중진공 거래우수기업 * 표준심사 : 직접대출 신용 3억원 초과 5억원미만 기업 * 심층심사 : 직접대출 신용 5억원 이상 기업
지원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결정시 융자심의위원회 심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결정시 융자심의위원회 심의 생략('08.11.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결정 기간 * 창업, 긴급경영안정자금 : 20일 *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복구) : 5일 * 그 외 자금 : 30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결정 기간 * 운전자금에 대한 융자결정기간 10일 이내('08.11.17~12.31한시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탈락업체 재심의 : 융자심의위원회(중진공 지역본부)에서 재심 및 본부융자심의위원회 삼심 ▪ 가압류·압류, 금융기관 연체, 부채비율 상한 초과기업에 대한 대출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탈락업체 재심의 : 재심위원회(지방중기청)에서 재심 ▪ 가압류·압류, 금융기관 연체, 부채비율 상한(300%~600%) 초과기업에 대해 중진공 지역본(지)부장이 종합 판단하에 지원결정 가능
자금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긴급경영안정자금 : 원부자재구입 용도 위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긴급경영안정자금 : 원부자재구입 용도 이외에도 기업경영소요 경비로 확대('09.1~)

자료: 중소기업진흥공단

Ⅲ. 주요 검토과제

1. 지원수요의 적정성

□ 정책적 인센티브에 의한 진성수요의 충족 여부

- 정부는 금융위기에 따른 신용경색 심화 및 실물 파급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기관 및 지원대상에 대하여 파격적인 정책적 인센티브를 제공
 - 대표적 조치들로는 보증비율의 상향 조정, 총액대출한도 확대 및 지원금리 인하, 지원대상 요건 완화 및 지원한도 상향 조정 등을 들 수 있음.
- 정부의 선제적 조치는 위기 초기 대응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으며, 양호한 지원 성과를 시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금융시장의 조기 안정, 기업활동의 급격한 위축 방지 등에서 정책 성과는 긍정적 평가를 받을 수 있음.
- 반면에, 정부가 금융기관 지원과 연계하여 은행과 체결한 MOU에 따른 중소기업 금융지원 목표의 이행이 미흡한 부분은 향후 바람직한 정책방향의 모색이라는 측면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
 - 우선, 금융기관에 제공되었던 정책적 인센티브가 이를 통해 정부가 현실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정책목표에 비해 과도한 측면이 있는지 여부, 즉 정책적 인센티브와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지원 노력 간의 불균형 문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또한, 앞으로 정부의 정책 의도를 어느 정도의 수준과 방법으로 관철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이와 관련하여 최근 전개된 MOU상 중소기업 대출 확대 목표치의 축소 조정 논의는 금융기관이 중소기업 대출 목표치를 달성하기 어려운 측면을 현실적으로 감안한 결과로 이해할 수 있음.

- 반면에, 은행들의 중소기업 대출 확대 노력에 대한 엄정하고 면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불명확함. 예를 들어 과거 비적격업체로 분류되던 기업군을 신규 고객으로 발굴하여 신용공여 대상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은행의 구체적 노력과 성과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라는 점임.
- 만약 정부가 은행들에 기대했던 중소기업 대출 목표치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면, 이에 상응하여 정부가 제공했던 정책적 인센티브의 철회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 보증비율의 정상화 문제를 들 수 있는데, 은행들이 적격업체 위주의 대출 공급행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보증비율의 상향 조정은 중소기업 대출 확대 효과보다 은행 위험의 경감 효과가 더 크게 작용할 수 있음.

□ 지원규모 급증에 따른 자금 가수요의 가능성

- 정부가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의 규모를 크게 확대한 것은 금융위기 및 그 파급효과에 따른 지원수요의 급증에 대응하기 위한 것임.
- 그러나 정상적인 상황에서 지원받지 못하던 기업들이 지원 혜택을 받는 것 이외에 공급 편의성에 의해 지원이 필요하지 않은 기업에게 혜택이 돌아갈 경우, 금융위기에 따른 실질적 수요 충족은 미흡한 반면 정부의 금융지원이 다른 용도로 전용될 여지가 증대하게 됨.
- 이 경우 공급량은 소진되기 때문에 이를 실질적 지원수요의 충족으로 잘 못 파악할 가능성이 적지 않음.
- 또한 지원용도 외 전용 및 유용 여지를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방법도 기술적으로 용이하지 않은 상황임.
- 중진공 정책자금의 설비자금 지원은 설비 판매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취하기 때문에 전용 여지를 차단할 수 있으나, 여타 은행 자금이

나 운전자금 용도의 정책금융 지원은 용도의 전용 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임.

- 자금 가수요의 여지는 지원한도의 확대와도 관련되는데, 정책금융 집행기관이 집행 편의성과 위험도 조절을 위해 확대된 지원한도 부분을 한도여력이 있는 기존 적격업체에 추가로 지원하는 상황을 예상할 수 있음.
- 신용보증의 경우 업체별 지원한도가 상향 조정되었으며, 중진공 정책자금의 경우에도 사업별·업체별 지원한도가 상향 조정되었음.
- 따라서 자금 가수요 측면에 대한 효과적인 감시, 관리가 필요함.

<표 III-1> 중진공 정책자금의 사업별 한도액

단위: 억원

구분		2008	2009
창업초기기업육성자금		20	30
개발기술사업화자금		10	20
지방중소기업기술사업화자금		-	20
신성장기반자금		30	30
지방중소기업경쟁력강화자금		-	30
농공단지입주기업지원자금		20	30
사업전환지원자금		30	40
긴급경영안정자금	일반경영안정	5	5
	일시적경영애로, 재해복구	10	10
	수출금융	10	10
소상공인지원자금		0.5	0.5

자료: 중소기업진흥공단

<표 III-2> 중진공 정책자금의 업체별 한도액

구분	2008	2009
잔액기준	수도권 40억, 지방 45억	수도권 50억, 지방 60억
매출액기준	매출액의 125%	매출액의 150%

자료: 중소기업진흥공단

□ 정책금융 역할의 적정성을 벗어난 시혜적 지원 여지

- 원칙적으로 정책금융은 시장의 자원배분 기능이 제대로 감당하기 어렵지만 정책적 지원 필요성이 있는 분야나 기업을 지원대상으로 함.
 - 이는 적지 않은 논란과 시행착오를 거쳐 정립한 정책적 합의로 받아들여지고 있음.
- 정상적인 상황에서의 시장 소외영역과 위기국면에서의 시장 소외영역의 차이가 있으나, 이를 명확히 식별하기는 어려움.
- 그러나 정책금융의 역할을 과도하게 확장할 경우 정책금융의 정체성을 교란하여 향후 중소기업 정책금융의 안정적 운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적지 않음.

2. 시장과의 역할 분담

- 금융위기에 따른 중소기업 금융지원 확대를 위해 정부는 직접적인 재정 투입이나 강력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민간 금융기관들의 중소기업 금융지원 기능을 제고하고자 노력함.
- 이러한 정책적 시도는 금융위기 상황에서도 은행들이 중소기업 대출을 급격히 축소하지 않고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지만, 이 과정에서 은행의 실질적 기여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가늠하기 어려움.
 - 예를 들어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순증규모는 4월 2.3조원, 5월 3.2조원이었으나, 동 기간 중 신용보증의 신규 보증공급 중 전액보증 공급규모는 4월 2.0조원, 5월 2.7조원인 것으로 나타남.
- 이제 위기 초기의 엄중한 상황이 개선 조짐을 보이고 있음에 따라 정책 이니셔티브에 거의 의존했던 지원 메카니즘을 시장과 함께 하는 지원 메

카니즘으로 전환시켜 나갈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또한 정책적 인센티브를 통해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확대를 유도하는 것은 일정한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도 유념할 필요가 있음.
 - 은행은 기본적으로 수익성을 추구하는 영리기관이며, 정부 의지에 비해 기관 자체의 위험관리에 치중하는 경향이 상존
 - 최근 신규 보증공급 중 전액보증 비율이 급증한 것도 이를 부분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정부의 정책 의도를 시장과의 역할 분담을 통해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수단과 경로가 현실적으로 많지 않은 상황이지만, 가능한 방법을 최대한 모색할 필요
 - 최소한, 시장 반응이 미온적인 데 반해 정책적 인센티브가 과도한 측면은 개선할 필요
 - 이와 관련하여 보증비율의 적정성 확보 문제는 우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3. 정책 위험도

□ 지원대상 및 조건의 적정성

- 지원규모 확대 및 지원요건 완화에 따른 정책 위험도 상승
 - 지원규모의 대폭적인 확대와 지원요건의 완화는 비적격업체의 지원 수혜 가능성을 증대시킴으로써 정책 위험도 상승을 초래할 수 있음.
 - 지원규모 확대는 지원요건 완화에 의해 견인되는 측면이 많기 때문에 지원요건의 적정성 여부가 정책 위험도의 핵심 규정요인이라 할 것임.

- 특히 지원한도 확대는 지원수요의 부분적 왜곡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지원 부실에 따른 위험부담을 증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신용보증의 경우 보증비율, 정책자금의 경우 직접대출 중 신용대출 부분이 정책 위험도에 대한 가장 큰 영향요인이라 할 수 있음.
- 만기연장도 집행기관의 위험관리 기능을 제한함으로써 정책 위험도 조절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음.
- 정책 위험도 상승은 향후 지원 부실의 부담 정도와 관련되며, 지원 부실의 사후 처리문제와도 연결됨.
 - 이번 금융위기에 따른 지원조치는 규모 측면에서 매우 크기 때문에 상대적 부실비율뿐만 아니라 절대적 부실규모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음.

□ 직접대출의 운용 적정성

- 중진공 직접대출 기능의 적정성 문제는 정책자금 지원방식과 관련한 주된 쟁점의 하나라 할 수 있음. 즉 비금융기관인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직접대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타당한가 라는 것임.
 - 이러한 논란의 이면에는 직접대출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일부 시중은행과의 경쟁성이 발생하고 이에 따른 은행권의 반발 등이 직접대출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작용한 측면도 있음.
- 1998년 외환위기 당시 금융시장의 신용경색 심화에 대응하여 시행된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직접대출은 2005년 정부의 중소기업 금융지원체계 개편방안에 근거하여 신용대출 중심의 직접대출 기능을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으며, 작년의 금융위기로 인해 중요성 및 활용도가 더욱 커진 상황임.
 - 2004년까지 20% 내외였던 직접대출 비중은 2005년 36.3%, 2006년 43.8%로 증가한 데 이어 2008년 49.2%, 2009년 1~5월 51.2%로 크게 늘어남.

- 직접대출의 도입 취지는 은행에 접근이 어려운 기업에 대한 자금 가용성을 지원함과 동시에 담보대출 위주의 은행 대출 관행이 유지되는 시장 여건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대출을 활성화하여 일반은행들의 대출 행태 변화를 유도하고자 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 직접대출의 타당성에 관한 주된 논점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직접대출 취급 역량과 사업량의 적정성에 있다 할 것임.
 - 제도의 취지가 당위적으로 옳다고 할지라도 재정사업의 운용 건전성을 크게 훼손하거나 위험 조절 차원에서 우량기업에게까지 지원한다면 직접대출의 타당성은 그만큼 약화될 수밖에 없음.
- 2009년 1분기까지의 직접대출 잔액을 기준으로 자산건전성을 분류한 결과를 보면, 정상이 전체의 91.8%를 차지하고 있으며, 고정 이하의 여신 비중이 6.3%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자산건전성 분류 결과에 따르면, 중진공 직접대출의 자산건정성이 매년 개선되고 있으며, 올해 1분기에도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 것으로 나타남.

<표 III-3> 직접대출 잔액의 자산건전성 분류 결과

단위: 억원, %

분류기준일	대출금 잔액	정상, 요주의			고정이하 대출금				
		금액 (비율)	정상	요주의	금액 (비율)	고정	회수의문이하 대출금		
							금액 (비율)	회수의문	추정손실
2006년말	20,588	18,868	18,422	445	1,720	485	1,235	273	962
	(100.0)	(91.6)	(89.4)	(2.2)	(8.4)	(2.4)	(6.0)	(1.3)	(4.7)
2007년말	23,655	21,704	21,333	371	1,951	642	1,309	217	1,092
	(100.0)	(91.8)	(90.2)	(1.6)	(8.2)	(2.7)	(5.5)	(0.9)	(4.6)
2008년말	28,735	26,729	26,112	617	2,006	666	1,340	186	1,154
	(100.0)	(93.0)	(90.9)	(2.1)	(7.0)	(2.3)	(4.7)	(0.6)	(4.0)
2009년 1분기	35,410	33,163	32,488	675	2,247	650	1,597	294	1,303
	(100.0)	(93.7)	(91.8)	(1.9)	(6.3)	(1.8)	(4.5)	(0.8)	(3.7)

자료: 중소기업진흥공단

주: () 내 수치는 잔액 대비 구성비율

- 결과 자체만을 그대로 해석할 경우, 2006년 이후 은행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기업에 대한 지원비중이 높아졌고 민간금융기관에 비해 신용대출 비중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우려할만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파악됨.
-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지원 시점과 부실발생 시점 간 시차로 인해 앞서 살펴본 신용보증 부실 수준과 마찬가지로 금융위기에 따른 지원조치가 매우 부분적으로 반영된 결과라는 점에서 향후 부실 위험은 증대할 것으로 예상됨.
- 지원대상과 대출방식이 갖는 정책 위험도가 누적적으로 증대할 가능성이 크다고 가정하면, 직접대출의 비중 확대보다는 위험 관리가 가능한 적정 사업량 수준에서 동 제도의 운영 내실화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음.
- 중소기업진흥공단도 기업심사평가모형 고도화, 신용대출기업 상시 모니터링, 재무상황 정기 점검, 분기별 대출금 건전성 분류 실시 등을 통해 위험관리시스템을 확충·강화하려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
- 그러나 직접대출 비중을 지속적으로 증대시키는 것은 직접대출 업무의 난이도와 필요 역량을 고려하면 신중한 접근이 요구됨.

4. 지원금리의 가격기능

- 정책금융의 또 다른 쟁점은 지원금리 수준의 적정성 문제라 할 수 있으며, 이는 특히 정책자금과 밀접히 관련된다고 할 수 있음.
- 그동안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시중금리보다 저리로 지원되어 왔음. 이는 과거 고금리 상황이 지속된 시장 여건에서 정부의 정책금융이 자금 가용성 지원뿐만 아니라 금융비용 부담 완화라는 정책적 역할도 수행한 것에 연유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 정책자금 지원금리와 시장금리는 과거 5~6%까지 격차가 확대되었다가, 최근에는 2% 내외의 격차를 보이고 있음.

- 그러나 은행의 대출대상과 정책자금의 지원대상 간 신용도 차이를 감안할 경우 실질적 금리 격차는 더 큰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표 III-4> 중소기업 대출금리 추이

단위: %

구분	1996	1998	2000	2004	2006	2007	2008	2009년 1분기	2009년 2분기
정책자금	7.0	8.5	7.5	4.9	4.4	4.75	5.0	4.6	3.8
은행대출	10.9	14.9	8.0	6.0	6.4	7.27	6.91	5.45	5.38

자료: 중소기업청, 한국은행

주: 정책자금 금리는 중소기업청 소관 정책자금 적용 평균금리임. 은행 대출금리는 연말 기준이며, 2009년 1분기는 3월, 2분기는 4월 평균금리임.

- 기본적으로 금융시장은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금리 구조를 보이고 있음. 이러한 시장 여건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정책자금 금리는 중소기업계의 최우선 민원 중 하나로 작용함에 따라 정책자금 금리체계의 변화가 미흡했던 것으로 파악됨.
- 그동안 시중금리의 인하 추세에 맞추어 매년 중소기업계는 정책자금 지원금리 인하를 정부에 대한 최우선 건의사항으로 제기하는 현상이 반복되었음.
- 원칙적으로 정책자금은 은행 접근이 어려운 기업군을 핵심 대상으로 한다면, 이들 기업에게는 자금 가용성을 제공하는 대신에 은행에 시장금리를 지불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일반기업에 비해 약간의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임.
- 만일 금리의 가격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정책자금 수혜기업과 일반기업 사이에 역차별 현상이 초래되고, 이로 인해 은행을 이용할 수 있는 기업들이 정책자금 시장에 참여하려는 유인이 발생하게 됨.
- 이전에 정책자금 운용상의 문제로 지적되었던 우량기업 지원 문제가 대표적인 예라 할 것임.
- 이는 정책자금을 지원받아야 할 기업의 몫을 일반기업이 잠식하게 되어

정책자금의 자원배분 기능이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임.

- 또한 정책자금의 지원금리가 현실화될 수 있다면, 정책자금의 운용 위험도를 흡수할 수 있는 여지가 상대적으로 확대될 수 있을 것임.

IV. 향후 재정운용방향

1. 정책금융 운용의 기본원칙

- 중소기업 정책금융은 시장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시장 친화적이면서 시장 보완적인 금융지원을 통해 궁극적으로 중소기업 금융을 선진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음.
- 여기서 '시장 친화'란 금융시장의 자원배분 기능을 왜곡시키지 않고 금융시장의 발전 방향에 조응한다는 의미이며, '시장 보완'은 금융시장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중소기업 금융의 사각지대를 정책금융을 통해 효과적으로 해소시킨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음.
- 자칫 정책금융이 시장기능의 발전에 역행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시장의 자원배분 기능은 개선되기 어려울 것이며, 정책금융이 시장 실패를 효과적으로 보완하지 못할 경우 정책금융의 필요성 자체가 위협받게 될 것임.
- 따라서 중소기업 정책금융의 개선을 위한 논의와 정책적 노력은 중소기업 금융이 직면한 현실적 제약과 시장기능의 변화를 동시에 고려하면서, 정책 비용을 줄이고 정책금융에 따른 사회적 편익을 증대시키는 방향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함.

(1) 금융시장의 구조적 실패에 대한 효과적 보완

- 정책금융의 개입 타당성과 여지는 금융시장의 중소기업 금융에 대한 시장실패 영역의 존재 여부와 정도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임.
- 정책금융은 독립적으로 존립할 수 있는 고유의 역할이 있는 측면보다는 시장금융과 중소기업 금융 간의 간극을 보완하고 줄여주는 차원의 상대적 의미에서 존립 근거를 갖는다고 할 수 있음.

- 중소기업 금융에서 시장실패 영역은 주로 상업적 논리의 은행 영업이 담당하기 어려운 중소기업 금융의 특성에 기인한 것이며, 구체적으로 시장 검증이 용이하지 않은 대상 기업군에 대한 자금공급, 신용위험이 상대적으로 증대할 수밖에 없는 장기 금융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 이러한 시장실패 영역에 대한 정책금융의 역할은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보이지만, 시장실패를 보완하는 정책금융의 효과성이 미흡하다면 정책금융 기능은 실효성 문제로 인해 타당성이 위협받게 될 것임.
 - 이는 중소기업 정책금융이 정책적 개입이 필요한 영역에 국한해 이루어져야 할 뿐만 아니라 보완효과를 실질적으로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
- 따라서 중소기업 정책금융은 시장기능의 개선 여지가 여전히 협소하거나 구조적으로 불투명한 영역에 대한 보완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시장실패 영역의 실질적 축소에 기여하는 형태로 발전해나가야 할 것임.

(2) 시장금융과의 명확한 차별화를 통한 유효성 제고

- 시장금융의 구조적 한계에서 비롯된 시장실패 영역에 대한 정책금융의 유효성은 유지될 수 있으나, 이 경우 시장금융과의 역할 차별화 문제가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중소기업 대출 전반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는 구체적 수혜대상을 시장금융과 차별화하지 않는다면 그 필요성은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은행을 활용할 수 있는 기업군이 주요 지원대상이고, 은행 대출에 대한 접근도 제고라는 지원 수요를 갖고 있는 은행 활용 가능성이 낮은 기업군이 오히려 부차적인 지원대상일 경우 정책적 개입의 타당성과 유효성이 그만큼 줄어들게 될 것임.
- 또한 정책금융의 지원이 필요한 기업군은 대부분 시장금융의 기준에서

보면 위험도가 높은 대상인 데 반해 이들에 대한 지원금리가 시장금융에 비해 우대적일 경우, 은행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요구하는 금융비용을 지불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기업에 대한 역차별 문제가 발생하게 됨.

- 이는 정책금융에 수요가 과다하게 몰리는 현상을 초래하여 궁극적으로는 지원이 필요한 기업의 수혜 기회를 오히려 줄이는 부작용을 낳게 됨.
- 요컨대 정책금융이 시장 경합성의 배제원칙에 입각해 시장금융과 명확히 차별화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또한 금융시장 상황이 유동적이므로 시장 상황과 수요구조의 변화에 대응하여 개입의 정도와 방식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음.

(3) 금융시장의 중소기업 자원배분 기능 확충 및 친화성 제고에 기여

- 우리나라에서 중소기업 금융은 수요와 공급 간 불일치 현상이 상당히 구조화되어 있음.
 - 수요 측면에서는 정상적인 수요 이외에 기업의 수익성 부진 등에 따른 단기자금 수요, 기업 운영 이외의 투기적 수요 등이 추가됨으로써 만성적인 과수요 현상을 보이고 있음.
 - 공급 측면에서는 은행들이 기업 금융에 필요한 인프라 투자에 소극적이며, 신용위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가계금융을 선호하는 반면 기업금융에서는 기업 외형과 담보 중심의 자금공급 경향을 보임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이 부문 간 불균형과 함께 안정적이지도 못한 것으로 파악됨.
- 또한 중소기업들의 자금조달 경로가 지나치게 간접금융에 치우쳐 있고 간접금융에서도 은행 의존도가 매우 큰 상황임.
- 이에 따라 중소기업 정책금융은 시장의 수급 불일치 현상을 개선함과 동시에 시장의 자원배분 기능을 보다 중소기업 친화적으로 유도하는 기능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

- 중소기업 금융환경이 큰 변화를 겪게 되면 변화 초기에는 시장이 미처 중소기업 친화적인 형태로 대응하지 못할 수 있으며, 이때 중소기업 정책 금융이 변화 수용적이면서 중소기업 친화적인 형태로 자원배분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시장의 긍정적 변화를 유도할 수 있음.
- 독일 부흥은행(KfW)의 경우 신용도 평가가 보다 엄격해지는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중소기업의 대출 원활화를 위해 중소기업의 자기자본을 확충하는 형태의 메자닌 금융(mezzanine finance)을 도입함으로써 시중은행들의 중소기업대출 활성화를 유도함.
- 이를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다양한 형태와 경로의 자금 공급 시스템을 확충하는 한편, 금융시장의 여건 변화와 중소기업 금융이 서로 상충되지 않고 조응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이 경주될 필요가 있을 것임.
- 요컨대 중소기업 정책금융은 중소기업 금융의 선진화를 위한 질적 기여도를 제고해야 함.

2. 향후 재정운용방향

(1) 지원 속도와 규모의 탄력적 조절

- 신용보증, 정책자금 모두 지원규모가 금융위기 이전에 비해 엄청난 폭으로 확대되었으며,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수혜받기 어려운 기업군을 지원대상에 부분적으로 포함
- 지원대상 측면에서 모든 정책금융 집행기관이 기존 지원등급 아래에 위치한 비적격업체를 신규 지원업체로 포함하게 되었으며, 이는 향후 지원부실의 위험도를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 또한 지원 속도 면에서도 신용보증은 8월 이전에 연간 목표치를 초과할 가능성이 높으며, 정책자금의 경우 분기별로 조절할 여지가 부분적으로

있는 상황인 것으로 파악됨.

- 사실상 올해 목표치 기준으로는 집행이 완료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속도 조절 여지는 상대적으로 협소
- 이러한 상황에서 만일 추가적 지원수요가 발생할 경우 대응 여력이 마땅치 않을 뿐만 아니라, 향후 부실 발생의 정도에 따라서는 연착륙 조정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
- 최근 금융위기 여파가 진정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지원수요의 급증세가 둔화되는 양상이 전개됨에 따라 이제 위기 이후의 연착륙적 조정을 준비할 필요
- 지금부터라도 가능한 범위내에서 지원규모와 속도의 조절이 필요
 - 신용보증의 경우 만기연장의 제한적 유연화, 정책자금은 직접대출의 단계적 축소 및 지원 심사 강화 등을 통해 일정한 수준의 조절이 가능
 - 또한 완화된 지원조건을 단계적 정상화를 통해 추가적인 지원수요를 차단하는 것도 조절수단으로 활용 가능

(2) 시장기능과의 역할 분담을 통한 정책금융의 역할 적정성 제고

- 신용보증, 정책자금 등 중소기업 정책금융상의 위기 대응조치들은 대부분 위기 초기에 시장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긴급 대응조치의 성격이 강했던 것으로 평가됨.
- 최근의 금융시장 상황은 확실한 판단이 어렵지만 적어도 위기 초기처럼 은행의 역할을 거의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과는 다른 것으로 파악됨.
- 은행 등 중소기업 금융관련 시장기구들이 어느 정도 정상화된 상황이라면, 정책 대응방식도 정부가 거의 전적으로 위험을 부담하던 형태에서 벗어나 시장과 정부가 일정한 역할 분담 속에서 상호 보완적인 위기 대응 방식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

- 따라서 정부가 민간 금융기관에 제공했던 정책적 인센티브를 단계적으로 정상화시키는 한편, 정책적 지원과 연계하여 민간 금융기관에게 부과했던 중소기업 금융지원관련 의무나 부담도 완화해나가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
 - 보증비율의 단계적 정상화를 추진하고, 이와 연계하여 민간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금융지원 이행목표를 완화하고 자율성을 확대
 - 다만, 직접적인 규모 조정방식보다는 지원조건, 대상에 대한 운용 자율성을 부여하는 형태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 이를 통해 정부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향후 재정운용의 연착륙적 조정 여지를 확대

(3) 사후관리 및 위험관리 강화

- 금융위기에 따른 선제적 대응조치들은 금융위기 초기의 엄중한 상황을 조기에 수습하기 위한 것임에 따라 집행 기준 및 절차상에서 신속성이 상대적으로 강조된 경향이 있으며, 이는 상대적으로 사후관리 부담요인과 함께 지원 부실 가능성을 증대시킬 수 있음.
 - 이 과정에서 집행기관별로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지원요건 완화로 인해 지원대상 선별에 추가적인 애로가 발생
 - 이에 따라 집행과정에서 기관 차원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였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인 상황에 비해 지원 부실요인이 증대할 우려
- 이에 따라 신규 지원수요의 급증세가 둔화되고 경기 흐름이 개선되는 추세를 반영하여, 향후 정책금융 운용의 무게중심을 신규 지원 위주에서 기 집행된 부분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향후 발생할 부실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옮겨갈 필요
- 사후관리 측면에서는 지원조건의 단계적 정상화, 지원자금의 용도 외 사용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등을 강구할 필요가 있으며, 위험관리 측면에서

는 기관 자체의 리스크 관리시스템의 정비, 확충을 도모

- 이를 통해 신규 공급분부터 지원의 부실 요소를 완화시키고, 기 집행분에 대해서는 지원규모 총량 측면에서 부실률을 최소화시키는 노력을 경주

(4) 재정 투입구조의 연차특적 조정

- 올해의 경우 이미 공급규모가 결정되었고 조만간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향후 부실이 본격적으로 발생할 시점을 대비한 재정운용구조의 연차특적 조정을 지금부터 준비하는 것이 중요
- 예를 들어 신용보증의 경우 기관 자체의 추정 결과에 따르면, 신용보증의 정상화에는 5~6년이 소요될 전망
 - 연차특 조정 여부 및 소요기간은 보증 해지, 증액 보증, 신규 보증 등을 어느 수준에서 조절하는가에 따라 결정
- 정책자금의 경우, 지원재원이 직접적인 재정 투입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지원에 따른 부실이 과다하게 되면 손실 보전방법이나 수단이 여의치 않은 상황임.
- 한편, 위기 이후에 재정 운용을 정상화시키는 과정에서 당면한 지원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 이는 비정상적 지원수요로 인해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상적인 지원수요에 대한 원활한 정책 대응이 어렵게 되는 결과를 초래
 - 과거 외환위기처럼 사전적 전략이 뒷받침되지 않은 채 단기 목표 지향적인 재정운용 조정을 추진할 경우, 당면한 지원수요에 대한 원활한 정책 대응을 제약함에 따라 또다른 조정 비용을 유발할 우려
- 따라서 이러한 요소들을 감안하여 부실규모에 대한 시나리오별 대응방안을 수립하여 중소기업 정책금융의 안정적 운용을 저해하지 않고 예측 가

능한 수준에서 재정 부담의 적정화를 도모할 필요

- 향후 재정 부담이나 지원수요에 대한 예상이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시나리오별 접근을 모색
- 위기 대응조치에 따른 지원이 어느 정도 일단락되면, 관련부처 및 관련 집행기관의 심층적 분석 및 검토작업을 본격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재정운용 방향의 기본 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
- 이를 기초로 재정운용의 연차별 조정에 필요한 부처별, 기관별 실천방안을 체계적으로 마련, 시행
- 또한 중소기업 정책금융의 지원금리나 보증요율 조정을 통해 지원재원 배분상의 가격기능을 확보해나가는 한편,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 부담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